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 제정·의대 전남유치 필요성 공감

전남도-민주당 당정협 무슨 얘기 오겠나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비용 개선
원전 폐로지역 국가산단지정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는 전남지역 최대 현안들이 두루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현안별 담당 간부 공무원들이 사업과 제도 개선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고,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최대 현안은 신입생 모집 시기가 오는 5월,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정이었다. 3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등 개교에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관련 법률 국회 통과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 역시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으나 3월 중 법안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립 의과대학 전남 유치의 필요성에도 전남도와 민주당은 공감했다.

1948년에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 갈등의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법부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정구 인용 결정(2019년 3월) 및 재심 공판 최종 무죄 판결(2020년 1월)을 내렸으며, 오랜 기일이 소요되는



15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승남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심제도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를 일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남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정원 3058명)이 있으나, 전남은 사·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해 7월 당정청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사단체가 파업을 불사하며 반발하자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전 재검토하는 것으로 후퇴한 바 있다.

원전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영광군 흥농읍 일원에는 발전 용량 590만KW/h 경수로형 원자로 6기가 운영 중인데, 2025년 1호기부터 설계 수명 40년이 도래한다. 발전 중단에 따른 세입감소(지역자원시설세),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 저장 등 주민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침체 가속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출향민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대도시와 지방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0~50%), 발생 농장과 거리에 따라 나뉘는 살처분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보험금 수취시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 인하,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 등 농협보험사에 유리하게 짜인 농작물 재해보험체제 개선도 건의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군공항 이전·공공의료원 설립·AI 광주현안사업 지원 적극 나서겠다”

송영길 민주 당권 주자 광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인천 계양구을·5선) 의원은 15일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 공공의료원 설립,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통합 메가시티 플랜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의 4자협의체 논의가 뜬 거운 감자 돌리듯이 팽팽게임으로 가면 안된다”면서 “제가 당의 책임을 맡게 되면 4자 협의체를 복원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가덕도 신공항과 배후도시와 연결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공공의료원은 순익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질병이 일상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의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건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만큼 광주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다”면서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 공공의료를 위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에너지공과대학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 신정훈 전 의원 등과 함께 대선 주요공약으로 채택시켰다”면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학생 모집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광주 AI인공지능 중심도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서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을 광주가 선도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었다”면서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4·7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장관과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검증된 분들이다”면서 “특히 최초 여성시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당심 잡기에 나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권 지지율, 윤석열 37%로 급등...이재명 24% 이낙연 13%

KSOI,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게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2%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가 24.2%, 이 위원장이 13.3%였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4.8%포인트 올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올랐고, 이 위원장은 1.6%포인트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8.3%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로 대구·경북(52.6%), 대전

·세종·충청(46.7%), 서울(46.1%)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주와 비교해 윤 전 총장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17.3%포인트,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9.2%포인트, 서울 지지율은 6.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71.2%)과 국민의당 지지층(61.8%), 보수성향층(54.2%)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컸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8.6%)과 진보성향층(43.4%)에서, 이 위원장은 광주·전라(38.5%)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2%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 WORLD WATER DAY

세계 물의 날

2021. 03. 22.(월)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

협조 |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영·섬유역본부